

“효력 정지” vs “평화 기여”... 여야 ‘9·19 군사합의’ 충돌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제시한 9.19 군사합의 전후 접경지대 북 도발 비교 자료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국감...2018년 군사 완충구역 설정·충돌 방지 등 담아 헌법재판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에도 ‘시각차’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적 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

쟁 상황을 거론,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만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또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

했다. 이상호 의원은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2020년 김영주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제정 논의가 이뤄진 법”이라며 “현재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호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라며 정부가 현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 주주는 김행 딸”

민주 최고위... “딸 재산 3년만에 12배 증가...부당한 재산 상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서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주를 약 3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최고위원은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기동순찰대, 우발 범죄 예방 효과 없어”

이형석 “운영 체계 개선해야”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2013년 경찰청 발주로 실시된 ‘취약지점 집중순찰의 범죄예방효과 실험연구’ 용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동순찰대는 이상동기 범죄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절도 외에 폭력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은 감소하지 않았고 112신고와 관련해서도 기동순찰대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또 경찰청이 2014년과 2015년 기동순찰대를 운영한 전국 10개 경찰서 관내의 5대 범죄 발생 현황



을 분석했다니 계획 범죄가 많은 절도는 대폭 줄어든 반면 살인, 강도, 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동순찰대를 점차 확대 운용하다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용도 폐기’ 했다. 이형석 의원은 “성급하게 조직개편을 해 기동순찰대를 부활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운영체계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I 산업 경쟁력 강화 그랜드플랜 마련 시급”

양향자 “국가전략기술 지정 필요”

국내 생성형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랜드플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전남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AI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립,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원, 인재 양성을 종합한 그랜드플랜의 필요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산업 전망은 밝다. 블룸버그 통신은 2032년까지 생성형 AI 시장이 1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글로벌 GDP를 7%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코지피티2.0’ 등 국내 IT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에 이어 글로벌 AI지수(The Global AI Index, 2023)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산업화 경쟁력은 18위에 그쳤다. 양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5년간 부산 입항 활어차 23%만 방사능 검사”

윤재갑 “검사 강제할 규정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11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명게와 가리비 등을 실은 일본 활어차가 매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꾸준히 입항하고 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1년부터 활어차에 대한 해수 방사능 검사 후 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활어차 1만 2278대 중 2893대(23%)만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



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가 시설은 만들었지만,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 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대당 20분이 걸리는 검사를 굳이 기다려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불응하면 일본 활어차의 입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